

# 한미FTA! 신화와 진실!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



# 차례



들어가며: 한미FTA 저지 투쟁의 의미와 방향	4
I. FTA! 자유무역협정인가, 국경을 넘는 착취체제의 완성인가?	6
1. FTA란?	7
2. FTA 탄생의 비밀	9
-다자간협정(WTO DDA)에서 양자간협정(FTA)으로!	
II. 한국FTA 선동가들의 거짓말, 거짓말...	12
거짓말1. 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15
거짓말2. FTA는 대세대!	17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멕시코민중의 증언 "NAFTA는 사형선고였다."	20
III. 한미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22

IV.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입을 통해 알아보는 부문별 영향	26
농업	29
노동	32
서비스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35
교육	38
의료	42
투자	45
금융	47
문화	50
V. 시애틀, 칸쿤, 마르델플라타, 홍콩, 그리고...	52
VI. 한미FTA 투쟁의 정치적 의미	54

들어가며

## 한미FTA 저지 투쟁의 의미와 방향

그 동안 FTA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FTA를 부문의 이익과 관련 지어 이해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는 농민들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한-일FTA는 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로 치환되었다.

지금 이 자료집을 읽고 있는 동지들도 소책자를 받아드는 순간 내가 일하고 있는 부문, 제조업이면 제조업, 공공부문이면 공공부문 등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며, 아마 거두절미 하고 자신이 속한 부문의 영향에 먼저 손이 갈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단지 자유무역과 관세인하, 시장개방의 효과가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산술만으로 찬반양론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환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자본의 착취체제의 완성이며, 한미FTA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계약법

안저지 및 노사관계 로드맵과 결합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총체이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계약법저지! 노사관계로드맵분쇄! 그리고 한미FTA저지!의 공동투쟁의 전선 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의 새로운 단계와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자본의 전략이 다층적이고 입체적일수록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의 단일한 전선에서 미제국주의, 초국적자본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1. FTA! 자유무역협정인가, 국경을 넘는 착취체제의 완성인가?



## 1.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또는 지역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

그렇다면, 노동자의 눈으로 FTA를 바라보자!

FTA는 글자 그대로 보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면 국가 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협정 대상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국가간 틀을 넘는 착취체제의 완성으로 읽혀진다.

FTA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가 어디에서 연유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FTA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

### 포인트1. 비관세무역장벽 철폐

비관세장벽은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정책, 예를 들어 공기업에 대한 소유제한, 노동, 환경, 공중보건 등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 포인트2. 이행의무강제금지

각 조약의 체결국은 투자의 조건으로 상품구매, 수입제한,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등 어떤 조건(쿼터)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유무역 체결 후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 포인트3. 무역 및 투자분쟁절차-투자자의 제소권 보장

FTA는 조약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지만, 그 역으로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를 경과해야 한다.

## 2. FTA탄생의 비밀

*다자간 협정(WTO DDA)에서 양자간 협정(FTA)으로!*

### 자본의 위기 극복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19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위기를 맞게 된 자본은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시기를 이야기 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영국 대처 정권의 광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격과 관제사 파업에 대한 레이건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이다. 이런 노동에 대한 공격이 한 축으로 진행되었다면 또 다른 한축에서는 제국주의의 시장확대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바로 WTO의 등장이다. 그 동안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 하에서 무역품목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업, 서비스 등으로 교역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런 제국주의의 의도는 세계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제국주의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불만을 가진 제3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의 결렬이 그 표현이다.

### WTO 뉴라운드 출범과 DDA협상의 정치적 파산

이런 불만과 각 국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뒤로하고 제국주의 진영은 다시금 자본의 위기탈출과 전 세계 단일시장 재편이라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

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한다. 2001년 11월 9일 4차 각료회의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 '도하개발의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고, WTO 뉴라운드가 출범한 것이다. WTO 뉴라운드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국가간(다자간) 분야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칸쿤에서 진행된 5차 각료회의의 결렬은 제국주의 진영에게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홍콩에서 진행된 6차 각료회의도 브라질과 인도를 포섭하면서 최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외부에서 확장되고 있는 투쟁의 압박과 내부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자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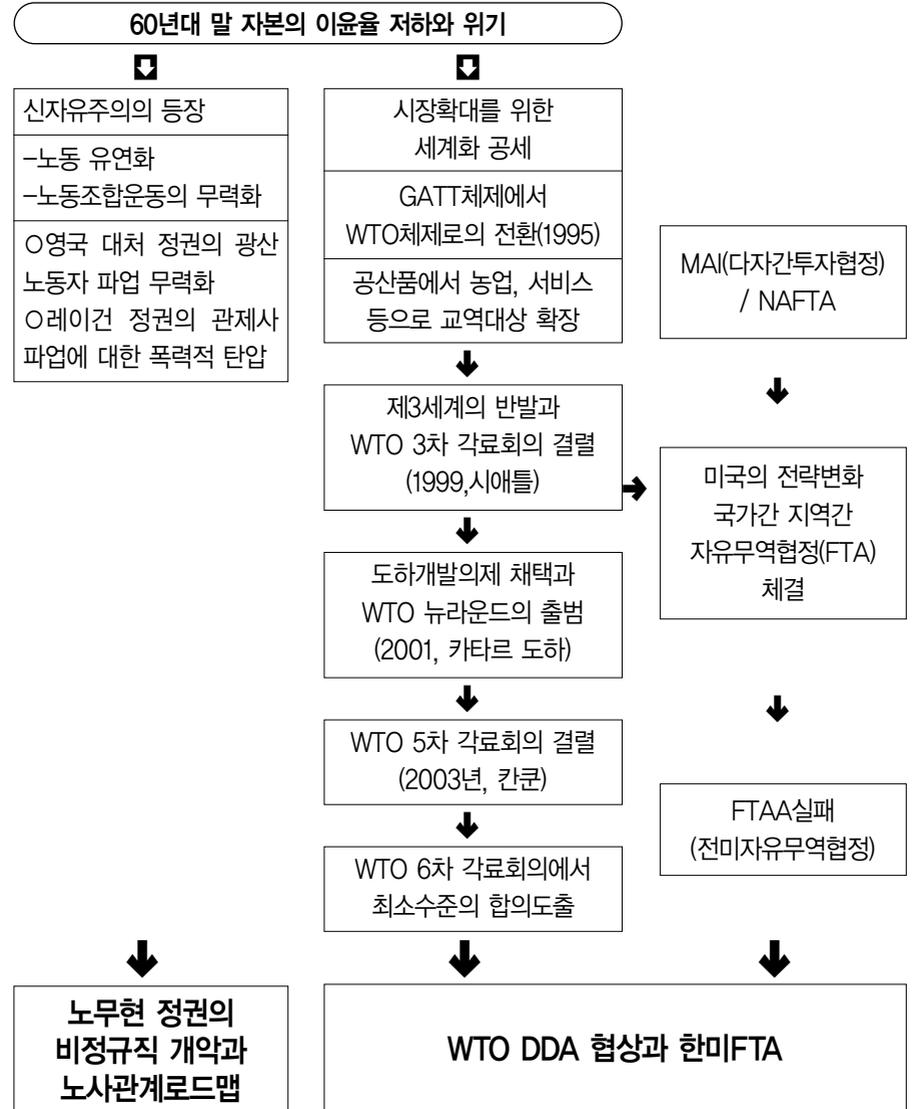
#### WTO DDA(도하개발의제)란?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142개 WTO회원국이 참석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 말
- 핵심 쟁점부문: 농업과 서비스
-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그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시애틀 3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자 다자간 협상에서 국가간(양자간) 또는 지역과의 FTA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다차원적 세계화 공세를 진행해왔다.

### WTO협상 실패를 FTA로! 이것이 미국의 FTA 전략이다!



[그림1. FTA탄생의 기원]

## II. 한국 FTA 선동가들의 거짓말, 거짓말...



### 노무현 정부의 선전포고!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한국 정부는 2006년 1월 26일 스크린 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그 동안 막혀 있던 한미통상 4대현안의 마지막 과제로 한미 FTA협상 개시의 신호탄이었다. 부문별 공대위를 비롯한 운동진영이 한미FTA 공청회를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은 이 공청회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스크린 쿼터 축소  
 최고시 수입재개 발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약가 안정문제 해결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 무역촉진권한(TPA)이 내년 7월 1일로 끝나는데 그 3개월 전에 미 의회에 협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10개월 이내에 즉, 내년 3월까지는 한미FTA 협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NAFTA이후 최대의 FTA'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국의 협상파트너인 한국 정부는 겨우 10개월만에 모든 협상을 다 해치우겠다고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이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이란?**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법은 미국대통령의 무역협상력을 대폭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가 토론없이 신속히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7월 1일 만료된다.

##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적 도박, 한미FTA

문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가 FTA를 통해 관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의 “한미FTA가 되면 경제가 망하고, 안되면 정치가 망한다.”라는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파산의 정치적 돌파구로서 FTA를 선택하는 위험성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진영 내부의 폭로였다.

근거없는 희망사항이었던 동북아 중심국가 이데올로기를 되살려 한미 FTA로 위기를 봉합하려는 어설픈 정치적 도박은 이 땅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을 뿌리부터 말살하려는 선전포고였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도박은 단순히 노무현 정권 차원을 넘어서 세계 자본주의의 기본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며, 세계로 비약해야 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한국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 한국자본도 한미FTA를 원한다!

FTA가 추진될 때 마다,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제조업, 특히 자동차 및 전자, 반도체 산업의 이익이 근거가 되어왔고, 이런 논리는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미국이 FTA 개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던 스크린쿼터와 쇠고기수입 재개 등 4대요구 외에도, 2005년 하반기에 제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가 한미FTA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촉구하면서, 다루었던 노동부문, 지적 재산권, 금융부문, 세제, 규제완화, 투명성, 시장접근 등의 항목은 그대로 이미 초국적 자본인 한국독점자본의 요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한국정부의FTA 추진일지 및 이후 협상일정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한제도 도입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발표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2월 3일	한미FTA 협상 공식개시 선언
3월 6일	1차 예비협상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를 담은 영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4월 2차	예비협상
5월 초	협정문 초안교환
6월 5~9일	1차 본협상(미국 워싱턴)
7월 10~14일	2차 본협상(한국)
9월	3차 본협상
10월	4차 본협상
12월	5차 본협상

## 저것말1. 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요즘 유행하는 ‘양극화 해소’는 한미FTA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FTA가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과거 5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20%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IT산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논리는 양극화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가라는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구조조정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한층 가속화 시키며, 한국을 60% 이상이 비정규직인, “일해도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 기초가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기조인 한에서, 그리고 초국적 자본이 한국정부에게 더 많은 노동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노동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 NAFTA 10년, “더 많은” 일자리도, “더 좋은” 일자리도 없었다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추진될 당시 NAFTA를 찬성하는 선동가들의 논리도 한국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NAFTA 선동가들은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NAFTA 10년 “더 많은” 일자리도, “더 좋은” 일자리도 없었다. 멕시코에서 8,073,20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이 일자리들 중에서 55.3퍼센트는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 사회보장, 보너스,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았고, 제조업 부분이 9년 동안 37.95%성장했음에도, 오히려 고용은 NAFTA이전보다 9.4% 축소되었다.

〈표1〉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표2〉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 거짓말2. FTA는 대세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한강의 기적’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이제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FTA가 대세인가?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그리고 2005년 홍콩으로 이어지는 WTO 협상의 좌초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전략은 변했다. 그러나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것은 미국이 추진해온 FTA의 내용과 그 성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자유무역의 초라한 성적표

교착상태에 빠진 WTO 협상을 보완하기에 지역자유무역협정이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는 사실상 턱없이 별 볼일 없는 수준이다.

특히 클린턴 정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은 오랜 동안 반세계화운동의 저항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2000년 4월 캐나다 퀘벡투쟁, 2003년 미국 마이애미 투쟁, 2005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투쟁 등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미 및 남미 모든 나라에서 FTAA에 대한 저항이 폭발하였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힘을 쏟는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차베스의 볼리바리안혁명을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 블록이 형성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양자간 FTA를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FTA의 경우 호주와 싱가포르 제외하면, 뭔가 의미있는 FTA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 미국의 FTA 목록

미국의 자유무역전략은 1) 전지구적 다자간 협상(WTO) 2) 지역별/대륙별 자간협상 3) 양자간 협상의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대륙별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전미자유무역협정 [FTAA]
- 아세안 [ASEAN]
- 중동자유무역협정 [MEFTA]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 안데스무역촉진협정 (Andean TPA)

- 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 (CAFTA-DR FTA)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SACU FTA)

### ▶양자간협상

- 호주/칠레/바레인/이스라엘/요르단/모로코/오만/파나마/페루/싱가포르

극단적인 친미노선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인 칠레가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했던 것이고, 그밖에 요르단,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등과의 FTA 밖에 없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FTA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말 외에 다른 수식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의 시작을 상징하는 징후이자, 냉전종식 이후 미국중심의 제국건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미FTA라도 건져보자!”

*“부시 행정부도 유사한 국내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중미자유무역협정은 2005년 하원을 겨우 통과했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는 잠재적인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중미자유무역협정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분쟁의 여지도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기 위한 험난한 길, 2006.3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조차 FTA가 험난한 길이며,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더 커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NAFTA의 총체적 실패, FTAA의 정치적 파산, 그리고 CAFTA의 험난한 여정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FTA가 대세가 아니라, 남미에서 잇따른 좌파후보의 당선과 미주 민중의 투쟁으로 FTA의 남하전략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미FTA에 조바심을 내며, 험난한 길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FTA가 대세가 아닌 속에서 한미FTA라도 어찌해 보겠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구원의 손길은 동방에서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정권과 자본의 살 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길을 열었고, 미국은 NAFTA이후 “15년만의 대박”을 환영하고 있다. 왜 그 구원의 손길이 한국이어야 하는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멕시코 민중의 증언

## “NAFTA는 사형선고였다”

2004년 1월 1일은 NAFTA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NAFTA의 파멸적인 결과를 고발하는 각종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NAFTA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은 NAFTA 선동가들의 거짓 선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NAFTA의 규정은 확일

적으로 모든 소속국가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멕시코 옥수수가격70% 하락
- 멕시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비,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가격하한제도 폐지
- 150만 멕시코 농가파산
- 멕시코인들의 죽음을 무릅쓴 월경과 1,600명 이주자의 죽음
- 멕시코 4000만 노동자들의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20% 감소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이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공유지 소유를 금지한 멕시코 혁명헌법 27조 수정
- 미국의 메탈클라드에 제소당한 멕시코 정부는 1,650만달러 보상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증가
- NAFTA의 전제조건을 캐나다 헌법 수정
- 캐나다 비정규직 NAFTA 이전 5.0%였는데 비해 11.6%로 증가
- 캐나다의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비율 87%에서 36%로 축소
-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에게 1,300만 달러 보상
- 미국 노동자 중 정리해고 보상제도로 혜택을 받은 노동자만 41만명(혜택을 보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내 700만명이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음
- 미국 기업의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해 노조탄압한 비율 68%(1999년통계)
- 미국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16%에서 13%로, 민간부문은 9%로
- 미국내 생산성 25% 증가(1990-2000년), 실질임금 8% 증가
- 미국에서 1990년대 새로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
- 미국내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미국의 임금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무력화

...“NAFTA는 사형선고였다!”

### III.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패한 WTO DDA 프로젝트를 살려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군사동맹과 함께”

한국 정부는 미무역대표부 대표 포트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미FTA는 NAFTA이후 최대 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며, 한국자본주의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처럼 선전해대기에 바쁘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정부와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한미FTA를 둘러싼 대결전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조가 신자유주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미국측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미국의 FTA전략은 이것이다!

##### 하나, 경쟁적 자유주의

FTA를 통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FTA를 자유무역의 확산수단으로 인식

▶ 교착국면에 처한 다자간 협상의 돌파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의 FTA!

##### 둘, 복합적 전략

FTA를 통상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반 등 복합적인 전략수단으로 활용

▶ 대륙별 정치군사적 요충지역에 FTA를! 신자유주의세계화는 군사동맹과 함께!

##### 셋, 포괄적 통합을 지향

FTA 협상을 향후 다자간 무역협정의 선례로 활용

▶ WTO plus 방식을 통한 교역대상의 확대, 순도 높은 개방!

FTA는 WTO DDA의 축소판!

##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 확보의 수단, FTA!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함으로써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과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한국정부는 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까지 체결이 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굳건해지고 경제적 연관이 높아짐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는 미국의 대 테러 선제공격 독트린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북아 정치·안보 패권 장악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무시한 발상일 뿐이다.

한국정부가 한미FTA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결국 자기 집 생선을 모두 갖다 바치고도 모자라 갈과 도마마저 모두 고양이에게 내맡겨 버린 꼴이 되었다.

미국은 FTA전략 중 핵심으로 각 대륙의 군사정치적 요충지역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정치안보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한 중동자유무역협정(MEFTA)도 추진하고 있다.

## FTA, 최상의 모델을 만들어라!

USTR(미무역대표부)관계자는 '한국 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Gold Standard가 될 것'이며 '이번 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포괄적'이란 말은 예외 없는 순도100%의 개방을 의미한다.

소위 신모델FTA로 불리는 '2004년도 모델 양자간투자협정(BIT)'에 따라 체결된 미-호주FTA를 봐도 그 '포괄적'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미-호주 FTA는 (1)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2)농산물 (3)제약 (4)초국경적서비스: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5)금융서비스: 미국계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전자상거래(e-commerce):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7)투자 (8)지재권 (9)정부조달 (10)경쟁정책 (11)분쟁해결절차규정 (12)노동 (13)환경 등 사실상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다가오는 한미FTA가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 모델에 따라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그야말로 미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에게는 15년만의 대박임이 틀림없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협정, 특히 다자간 투자협정(MAI), WTO 도하개발의제, 쌍무투자협정(BIT) 등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것이다. 결국 FTA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가장 포괄적으로 WTO DDA협상 내용을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 VI.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입을 통해 알아보는 부문별 영향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정은 거의 대부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측 논리는 WTO 협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업은 포기하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일종의 상생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정부의 논리는 FTA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FTA의 전반적 기초와 그것의 중장기적 영향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결과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의 입을 통해 한미FTA의 의도와 각 부문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그 어떤 통계수치보다도 미국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의도를 잘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온 발언들이다.

### 미국 독점자본이 원하는 것

한미FTA는 기존의 WTO DDA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 외에도, 규제개혁, 투명성 및 시장접근 등의 기초를 통해 노동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경직적이며, 한국의 노동쟁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장애가 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미국독점자본의 핵심적 요구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공기업의 사유화 역시 FTA의 한 부분을 이룬다.

# 농업

〈2005년 정책보고서〉는 ‘규제완화, 투명성 및 시장접근’ 항목에서 에너지 부문의 분할민영화와 대외개방, 의약품 가격규제 폐지,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 규제 완화, 방송·통신부분의 개방 및 미국기준의 강제, 담배시장의 추가개방 및 동등한 대우 등 과도한 개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한미FTA의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고, FTA 협상과정에서 더욱 확대된 요구로 강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투명성 등의 신자유주의적 의제들은 자유화 및 개방화와 연동되어 강제될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요구들이 재벌이라 이야기되는 한국의 초국적 자본 또한 지속적으로 강제해온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한미FTA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고용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한미FTA 초안을 통해 분석을 심화시켜 폭로해야 할 내용이다.

**예외는 없다!**

## STOP Farmer Terror Action!

“이번 FTA는 특히 미국 농산물 생산자에게 특히 이익이 될 것이며 이 주요한 시장에서 미국 농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미국 평균 관세율 12%보다 네 배 높은 한국 평균 관세율 52%를 인하하면 미국 농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미국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다루게 된다면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

### 진정 농민의 생존권을 초토화 시킬 것인가?

한미FTA은 한미 Farmer Terror Action이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추진되어 온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Farmer Terror Action이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개방했고, 이를 시작으로 농업은 급격한 해체를 겪어 왔다.

〈표1〉식량자급률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식량자급률(%)	80.5	56.0	43.1	29.7	31.1	30.4	26.9	25.3

〈표2〉각국의 곡물자급도 현황 (농림부, 2003)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곡물자급률	133.5%	99.6%	162.0%	194.5%	132.1%	26.9%

## WTO협정은 카길 협정!

GATT의 8차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농업이 포함된 이후, WTO 농업협상은 초국적농업자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어왔다. 카길 이 WTO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WTO협상이 카길 협정으로 불리고, 전 세계 곡물 교역의 75%를 초국적농업자본인 미국의 카길과 AMD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WTO의 배후에는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추동한 주요 동력이었던 초국적 농업독점자본이 있었다.

## 농민의 수를 40만으로! 농업부문의 45% 생산감소!

한국 정부는 그 동안 WTO협상뿐만 아니라, 한-칠레FTA에서도 비교우위에 따른 제조업의 이익 운운하며, 가장 큰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한미FTA에서

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이 외부의 충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현재 366만명에 달하는 농민의 수를 4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또한, 한미FTA가 진행될 경우 한국농업총

생산(2003년) 2조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서 8조 8천 910억원(미국국제무역위원회 추정)으로 생산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악의



경우 45% 생산감소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한국의 농업을 개방해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초국적농업자본의 이익에 복무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본이 세계로 도약 할 수 있는 비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이다.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Farmer Terror Action일 뿐이다.

## 노무현, 당신이 전 세계 농민을 학살하는 주범이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에게 WTO협상에서 농업부분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가장 극단적인 대립속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WTO협상을 번번이 결렬시켰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가 그러했다.

바로 이 농업부분을 한국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하고, 스스로 자국의 농민을 초국적농업자본에게 희생양으로 갖다바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농업부문 협상이 진전을 이룬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농업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법을 바꿔라! 미국식으로!

“임금, 수당, 근무규칙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기준을 토대로 인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성 있고 개방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경영진이 그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 시장의 수요 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세제상 공정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 ▶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상황과 법률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사업을 경영할 경영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 단체행동 기간 중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허용함으로써 장기화된 작업중단 기간 중 기업의 장기적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기업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노사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현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중-

노골적인 노동법개정 및 노사관계 개선(?)요구 : 미국식 로드맵

기존의 FTA 자체의 경우, 노동문제를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 다루는 외에는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어, FTA의 대노동기조는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한미FTA를 촉구하면서, 한미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제출한 <2005년 정책보고서>에 노동문제에 대한 처방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이 관철하려는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2005년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자본의 요구를 정리해 보자.

<정책보고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노사관계 균형 개선, ▶작업중단 중 대체 노동력 투입 허용, ▶다년 고용계약도입 등 5가지 핵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노동시장유연화 요구는 노동조합의 협상력 무력화와 경영진의 권리보장으로 구체화된다. 즉 시장의 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을 해고·전환시킬 자유, 비정규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본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고통고 시한단축,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허용, 노사관계 위반의 민법처리 등 노동관련 법안의 개악을 당당하게 요

구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와 임단협 계약기간 연장(1년→2~3년) 등 미국식 노사관계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한미FTA를 촉구하면서 미국자본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내용이며, 동시에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투쟁으로 저지해온 법과 제도들이다. 더욱이 <정책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들은 미국과 서구의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적 합의주의 또는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 체제에 간혀, 자본의 무차별 공세 앞에서 후퇴하면서 빼앗긴 권리들이다.

미국 자본은 한미FTA를 통해, 자본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합리화하며 압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를 통해, 이윤율=착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운동을 강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독점자본이 원하는 바이며, 그것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겐 노동운동의 죽음이자 미국식 “지옥의 공장”의 수입이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VS. 노사관계로드맵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고시 사전통보 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것</li> <li>●노사관계 위반을 형법 관할에서 민법 관할로 바꿀 것</li> <li>●노동관계법 제43조를 삭제할 것: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허용</li> <li>●임단협 개시전 파업찬반투표 금지</li> <li>●퇴직금제도 없애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할 것</li> <li>●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현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리해고 요건완화</li> <li>●공익사업대체근로확대와 최소업무유지제도 신설 및 긴급조정확대강화</li> <li>●파업결정 절차 강화</li> <li>●노동조합 유급전임자 축소</li> <li>●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li> <li>●부당해고 구성요건 강화와 벌칙조항 삭제 또는 완화</li> <li>●직장폐쇄 확대</li> <li>●단협 유효기간연장</li> <li>●교섭·쟁의 대상제한</li> <li>●도산절차 중의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및 단협 효력 무효화</li> <li>●임금 유연화</li> </ul> |
|--|---|

## 서비스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 아직도 초국적 자본은 사유화에 목이 마르다!

“한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취하긴 했지만, 2005년에는 새롭게 민영화된 것이 없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30일 국영기업을 더욱 강력히 통제할 것이며,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의 갑작스런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6 미 무역장벽 보고서 중-

“최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 하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부문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원칙하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중-

### 네가티브리스트방식 = 100% 공공서비스개방

미국은 호주와의 FTA협상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제외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이 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개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모든 공기업과 서비스 부문이 개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한미BIT 협상을 되돌아본다면 이후 미국의 공공서비스 개방 요구가 얼마나 거셀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20여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 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100%의 순도높은 개방을 외치는 것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 서비스의 개방요구는 훨씬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측에서 가스 및 상하수도 부문의 민영화 논의를 슬쩍 흘리기 시작하는 데서도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짐작된다.

한미FTA 서비스 협상에서는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의료', '공교육',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철도·체신·통신 등의 공공사업'이 포함된다.



## 헌법도 고쳐라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헌법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쳤고, 멕시코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 산업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공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혁명의 산물인 헌법 27조를 고쳐야만 했다. 겨우 900 페이지에 달하는 NAFTA의 조항은 사실상 한 국가의 헌법을 상회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었다.

## 공공영역의 해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증가!

공공영역에서의 개방과 사유화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와 비용증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및 비정규직의 증가,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의 확보 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

## QUIZ

Q. 한국 정부가 서비스 협상에서 예외로 지정할 공기업을 쓰시오.

A. ???....

## 협상내용은 국가기밀? 교육개방 · 시장화 · 상품화는 빈곤과 상실감의 대물림!

### “국가기밀???”

교육개방의 목표와 정도를 유추하기 위해 미국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짐작컨대 이미 한국의 교육시장 개방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 이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는 점과 서비스 관련 협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대상으로 굳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개방하고 영리산업화 할 것인지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 지금까지의 교육개방 협상진행상황

- 94년 우루과이 협상: 교육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 단계별 개방약속
- WTO DDA협상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추진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제출, 05년까지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 진행 (초중등 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받음)
- 2003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2006년 2월 WTO DDA의 복수적 양허 요청안 미공개

### 교육개방은 이미 폭넓게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그 동안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WTO DDA 협상과정에서 초중등 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고등교육의 경우 부분 개방, 성인교육의 경우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표현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서, 중학생 이하의 유학도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과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 채용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또 2006월 복수적 양허요청안의 주요 내용이 (사립)고등교육 서비스와 (사립)기타교육 서비스의 시장 접근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테스팅(Testing)서비스의 정체는?

WTO DDA 협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양허안 제출과 별도로 한미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가	양허요구사항	1차 양허(2003)	2차 수정양허(2005)
한국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미국	고등교육 교육테스팅(Testing) 및 훈련서비스 포함한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한미 양자간 WTO DDA 협상 상황(출처:교육인적자원부, 2006)

특기할 만한 것은 교육테스팅 서비스와 훈련서비스의 정체이다. 테스팅 서비스가 현재 영어능력인증시험 수준이라면 더 이상 추가 개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것의 정체가 단순한 영어능력인정시험 정도를 넘어서는 학령인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입된 사교육산업체나 또는 준비가 가능한 학교들로부터 미국의 학력을 동시에 인증받기 위한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 교육양극화의 대물림은 빈곤과 상실감의 대물림!

교육의 공공성이 취약하며,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에서 미국과의 FTA체결은 한국의 공교육을 미국의 학위를 위한 들러리로 만들 것이고,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계층에게는 또 다른 상실감과 빈곤을 대물림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외국학교에서 출발하는 교원자격의 유연화

지금도 원어민교사 등 교원양성체계에 적용받지 않는 교원이 있지만, 이것을 떠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면 기업경영원리를 수용하여 교육노동자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다. 또 외국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원자격 유연화도 마찬가지로 일반학교로 확대되어, 지금도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교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규교사 노동의 문제는 더욱 확산될 여지가 높다.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치동 아줌마’의 교육전략이 화제로 떠오르는 오늘의 한국 사회 한 편에서는 공교육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교육은 계급과 계층이 되물림 되지 않고, 이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육이라 부른다. 그러나 교육개방, 시장화, 상품화는 최소한의 공교육조차 붕괴시킴으로써, 교육 양극화와 고착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 자발적 자유화 조치

#### 자발적 자유화 조치란?

- WTO 협상완료 이전에 행하는 개방화, 시장화 조치
- 자본진입을 위한 통로개설, 진입장벽 폐지, 국내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의 중단 등을 포함
- 개방의 예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시장화 조치도 포함

#### 자발적 자유화 조치 진행상황

- 경제자유구역: 2005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등에관한특별법과 그 시행령통과
- 제주특별자치도: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자립형사립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

FTA가 노동자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

“... 2000년 이래 소수의 제품만이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과학적 자료나 품질을 토대로 혁신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경제적 사항 및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혁신성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몇몇 혁신적 신약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 때문에 한국시장에서 시판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중-

국내독점자본과 초국적자본의 이해는 같았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문이 의료부문이다. 4가지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에서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중단을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반대하지 않았고, 광우병 수입재개가 되면 거대 외식 자본들에게 이익이라는 정부보고서며, 한국의 민간보험도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



수 있는 부문이 의료부문이다. 4가지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에서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중단을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반대하지 않았고, 광우병 수입재개가 되면 거대 외식 자본들에게 이익이라는 정부보고서며, 한국의 민간보험도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

지정제를 강제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점 등, 하나하나 한국 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없다.

초국적자본에게는 무한착취의 자유를, 민중에게는 오직 죽을 권리만을!

미국은 매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수정압력을 가해왔다. 주된 목적은 미 제약사의약품의 혁신성과 가격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정해줄 것, 미국과의 합의하에 미국과 일치하도록 한국의 의약품가격정책을 변화시킬 것,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미 제약사의 의약품이 한국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특허강화, 정보독점권 강화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차단을 강제해왔다.

결과는 의약품 가격의 폭등과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며, 여기서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250~630만원을 노바티스에 지불해야 하는 백혈병환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 요구한 A-7평균가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 했던 경험은 이제 백혈병 환자들만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다. 한미FTA는 돈이 없다면 죽을 권리 밖에 없는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공적 의료체계의 종말을 고할 것인가?

미국은 한미FTA협상 통보문에서 ‘투자부문에서 미국법의 적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정부에 개인건강보험 허용을 강력하

# 투자

## 유명무실해지는 국가권력!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있어 방해 또는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규칙을 확립하도록 하고, 동시에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투자자들에 비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법 원칙과 집행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해 주도록 한다.”

-USTR하원서한-

### 전투적 노동운동은 비관세무역장벽!

WTO와 마찬가지로 FTA도 ‘무역장벽’의 범위를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 또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협상이 중단된 한일FTA에서 일본은 한국이 철폐해야 할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기풍을 지적하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무를 철폐할 것, 퇴직금 산출을 유연화할 것,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격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공기업에 대한 소유제한, 노동, 환경, 공중보건 등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모든 것은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

게 주장했다. 미국법의 적용은 곧 미국의 방식대로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건강보험허용은 미국식의 개인건강보험의 허용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외국인본 유치를 이유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국가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의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는 한미FTA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생명과 직결된 경고를 보내고 있다.

### 광우병도 수입하는 나라, 한국

한미FTA 협상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었다. 지난 3월 14일 미무역대표부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축산자본과 미국정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국민에게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를 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FTA로 노동자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

- 미국제약회사의 특허권 강화      ➡ 의약품 가격과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  
➡ 약 못 먹게 해서 죽이고,
- 영리병원허용 및 민간으로보험도입 ➡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 받아줄 병원 없게 해서 죽이고,
- 검역조치제안완화                    ➡ 광우병 소 수입  
➡ 싼 맛에 광우병 쇠고기 먹여서 죽인다!

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속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천국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NAFTA 11장의 재현과 론스타의 악몽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무역장벽 폐지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며, 한미FTA가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NAFTA나 ‘2004년도 모델 양자간투자협정(BIT)’ 모두 투자자가 집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명높은 ‘NAFTA 11장’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미국 기업 메탈클라드는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67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얻어냈고,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이라는 기업에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만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기관이 론스타를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오히려 론스타 펀드에게 역으로 제소당하는 악몽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 금융

### 금융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개방화된 글로벌 영업기준! 세계 단순화!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국금융서비스 산업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 모집인 등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사회 프로그램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의 제안을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진정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한국이 지역 금융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타 지역 금융 허브와 경쟁 할 수 있도록 세율과 과표를 낮추어야 합니다...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세법은 특정 거래나 활동에 적절한 세금 측면에서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감사인은 과세 관련 법규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반론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자문사들은 소득의 분류와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세무처리 등의 이슈를 다루는 세무 관련 판결과 규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중-

## 더 개방하고 더 자유롭게!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다 개방화된 검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우체국-농협-수협-축협 등 준정부 기관들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을 것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요구 ▶포지티브 규제 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요구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정과 기준을 보다 개방화된 글로벌 영업기준으로 전환요구 ▶금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요구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세율 및 과표를 낮추라는 내용의 세제 단순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요구로 정리될 수 있다.

## 투기의 완전 자유화

투기, 즉 미국 자본들의 표현에 따르면 투자의 완전자유화도 FTA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주식보유는 40.1%로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 외국인 투자의 51%가 투기성이 강한 증권 투자이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도 공장설립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 투자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5년 현재 45.6%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오는 투자의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이고, 한미FTA가 체결되어 투자가 완전 자유화 된다면, 투기성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라!

금융과 관련된 자유화는 이미 IMF이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자본에게 충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도 모자라서, 글로벌 영업기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자유화의 폭을 더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 금융자본은 세율과표를 낮추라며, 투기를 통한 이익을 해외로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 또 한 차례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예고

또한 〈정책보고서〉에서는 금융부분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의 제안을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역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부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FTA 체결이후 금융부문의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또 한 차례의 대폭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이 때 노동자 계급의 대응을 미연에 봉쇄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득한 유연화된 금융 부문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스크린쿼터는 스리쿠션?

“이것은 환영할 만한 발표이다. 한국은 미국 영화 산업과 모든 미국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다.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은 전도유망한 시장에 접근도를 높여 해 줄 것이며 지적 재산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미영화협회는 중요한 시도를 시작한 무역대표부의 포트만 대사와 부시 행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전미영화협회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댄 글릭먼



### 스크린쿼터는 시작일 뿐이다.

한미BIT협정 논의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쿼터 제한 축소는, 결국 한미FTA협상을 선언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스크린 쿼터를 출발로 해서 미디어 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에 대한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 자본은 방송의 소유제한을 풀고, 방송쿼터 및 광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스크린쿼터는 시청각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에 불과하다. 스크린쿼터를 시작으로 광고, 통신, 방송시장이 개방되면, 공영방송이 붕괴하고, 상업방송을 중심으로 한 선정적 폭력프로그램이 난무할 것이다. 방송은 무한 시청률 경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 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요구사항

- 스크린쿼터 축소
- 한국방송공사 해체
- 지상파 및 케이블TV 쿼터 해제
- 방송산업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폐지

결국, 문화의 다양성은 파괴되고 시청각 미디어 부문의 노동자들의 고용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대규모의 비정규직 양산은 불가피 하다.

# V. 시애틀, 칸쿤, 마르델플라타, 홍콩, 그리고 ...

## 60:40 팽팽한 접전, 승리가 눈앞에 있다! -시애틀, 칸쿤, 마르델 플라타, 홍콩, 그리고 서울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은 WTO DDA 협상을 교착국면으로 밀어붙이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본격적인 반세계화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던 1999년 시애틀 전투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했다. 이어 워싱턴(2000.4), 멜버른(2000.9), 프라하(2000.10), 서울(2000.10), 퀘벡(2001.4), 제노바(2001.6), 바르셀로나(2002.6), 칸쿤(2003.9), 마르델플라타(2005.11), 부산(2005.11), 홍콩(2005.12)으로 WTO, IMF, 세계은행과 G8, EU 정상회담 등의 국제회의가 있는 장소 어디에서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 동원투쟁은 이어져 왔다. 특히 2006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FTAA의 사실상의 파산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전 세계적인 반세계화 운동의 승리이며, 이 여세를 몰아 반제국주의 반자본 전선으로 반세계화 운동이 전진하는 징표이기도 했다.

한국 운동진영도 회담장으로 날아가 거리에서 강력하게 전개되어온 반세계화 투쟁을 국내 운동과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반세

계화 운동이 이슈파이팅이 아닌 대중운동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주의의 공세론을 분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WTO DDA 협상이 2004년 7월 기본틀 합의에 이어 6차 각료회의에서 최소한의 합의도출로 기사 회생했고, 지역간 국가간 FTA 공세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 대 초국적 자본 및 제국주의와의 싸움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동시에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도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파산이라는 승리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26세 미만 최최고용계약법이 2개월에 걸친 학생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력화된 사례는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점점 더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제 한국의 운동이 답할 차례이다. 미주 대륙 민중들의 FTAA 저지 분쇄 투쟁의 뒤를 이어 한미FTA의 사망을 선언하자!

## VI. 한미FTA 투쟁의 정치적 의미

한미FTA는 미제국주의, 초국적자본,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저지투쟁은 반세계화투쟁의 주요한 고리이다.

한미FTA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환이며, 위기에 처한 WTO DDA 등 신자유주의 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다면적 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 저지투쟁은 넓은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제국주의와 정권, 국내의 초국적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이다.

반미애국의 교란을 넘어 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 정권 반대투쟁으로!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국내 자본분파의 이해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대, 삼성, SK, LG 등 한국자본으로 이야기되는 자본들 또한 이미 그 자체로 초국적 자본이다. 소위 재벌이라고 이야기되는 자본들 또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국제자본운동에 편승해 도약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국가간 대립의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 그러므로 WTO에서 FTA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의 구조화 공세는 단지 제국주의-식민지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단순한 반미투쟁이 아니라, 한미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에 의해 확장되어야 하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투쟁이다. 그리고 남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그 정치적 고리는 총자본으로서 노무현정권이다.

한미 FTA 저지하고, 반제반세계화 투쟁의 승리의 전망을 열어가자!

한미FTA저지투쟁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로 인해 에콰도르, 페루 등

에서 도로봉쇄와 파업투쟁으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FTA저지투쟁의 일환이며, 반세계화운동의 새로운 단계이자 영역이다. 감성적 민족주의에 편승한 반미주의의 교란을 넘어, 한미 양국 초국적 독점자본과 국가들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핵심고리를 정교한 전술로 타격하는 전방위적 총력투쟁을 통해 FTA저지운동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 것은 한미 노동·민중·사회운동 진영에 공통적인 과제이다.

### **비정규직개약입법저지!노사관계로드맵분쇄! 한미FTA저지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승리의 전망을 열어가자!**

이제 한국의 운동진영도 전면적 투쟁으로 화답해야 한다. 비정규직개약입법,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에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한국 자본의 고백일 뿐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입체적이다. 비정규직개약입법,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다층적 입체적 공세이다.

이런 다층적 입체적 공세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반세계화 운동이 물리적으로, 질적으로 결합해야만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저지투쟁은 비정규직개약입법저지! 노사관계로드맵분쇄!와 결합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에서 새롭게 열어가는 반자본 운동의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비정규직개약입법저지! 노사관계로드맵분쇄! 한미FTA저지!로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의 승리의 전망을 열어가자!